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등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14일 오후 광주 YMCA무진관에서 '비상시국회의'를 열고 5·18 역사 교과서 삭제를 규탄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호남4·19혁명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김영용)는 14일 오전 광주시 동구 계림동 호남4·19혁명기념회관에서 중학교 역사교과서 5·18 삭제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주의를 박제화시키는 현 정부의 음모를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장관이 최종 결정권자인데... 권한 밖이라니 말이 되느냐”

■ 광주 연석회의 대표단 '5·18 삭제 막기' 숨가쁜 하루

강운태 광주시장·김영진 의원·장휘국 광주시 교육감·김준태 5·18 기념재단 이사장 등 '새 역사교과서 5·18 민주화운동 삭제 철회를 위한 광주지역 범시민단체 연석회의' 대표단은 14일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중학교 역사교과서 삭제를 막기 위해 숨가쁜 하루를 보냈다.

이날 만난 청와대와 정부 측 인사는 김황식 국무총리, 임태희 청와대 비서실장, 이주호 과학기술부장관 등. 여기에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김진표 원내대표를 만나 정부 측을 압박할 수 있도록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전면 바꾸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해달라고 요구했다.

우선 대표단은 이날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오전 9시30분 서울 국회 2층 귀빈식당에서 이주호 장관 등 교과부 관계자 3명을 만나 5·18의 새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삭제와 관련, 대화를 나눴으나 분위기는 시종 일관 냉랭했다.

강 시장은 "이번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을 즉각 폐기하고, 5·18 민주항쟁 역사와 의미

청와대·정부측 잇단 면담

“집필기준 즉각 폐지하라”

민주당에 정부 압박 요구

손대표 “장관해임안 제출”

를 보다 구체적인 서술을 통해 민주주의의 교육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이번 집필기준에 5·18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은 물론 교과부에서 이를 공식 문서화해야 한다"고 강력 요구했다.

이에 이 장관은 "이날 국사편찬위원회가 공동주관하는 교과서 집필기준 설명회에서 광주지역 요구사항을 교과부 관계자들이 충분히 설명토록 하겠다"며 "이런 내용이 역사교과서 집필과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는 당초 대표단이 요구한 집필기준의 변경과는 거리가 먼 답이었다. 이 장관은 "검토해보겠지만, (장관) 권한 밖의

일"이라며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그리고 개인 일정을 이유로 회의 도중 회의를 떠났다. 이 장관이 떠난 뒤 늦게 회의를 찾은 민주당 김영정 의원은 "장관이 최종 결정권자인데, 권한 밖의 일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라며 따져 물었다. 이날 회의는 1시간 동안 진행됐지만, 서로 입장만 확인한 채 결론 없이 마무리됐다.

대표단은 또 김황식 국무총리를 방문한 자리에서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즉각 폐기 ▲5·18 민주항쟁의 역사와 의미 ▲5·18 기록물 유엔·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 사실 수록 등을 요구하며 항의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이날 교과서 집필기준 설명회 결과를 지켜본 뒤 얘기하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단은 이어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김진표 원내대표와 만나 "집필기준 즉각 철회를 당론으로 해주고, 이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손 대표는 "집필기준을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만약 정부가 이를 강행하면 교과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과 국정조사 요구 등 강도 높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대표단은 손 대표 방문 직전 손 대표와 회동을 마치고 나온 임태희 실장과의 만나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변화를 강하고 요구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누락된 불이익 준다던 교과부 “개정 요구안은 참고용”

■ 집필기준 설명회 가보니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교과용 도서 집필기준 설명회'가 14일 교육과학기술부 주최로 열렸다.

교과부는 "5·18 민주항쟁이 빠진 역사교과서는 검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참석자 상당수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교과부는 이날 서울교육대학교 에듀텔센터 2층 강당에서 '교과서(국어·도덕·역사·경제) 집필기준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교과부 관계자를 비롯한 출판사 직원 등 200명이 참석했다.

주요 쟁점 사항 가운데는 5·18 민주항쟁·6월 항쟁 등 민주주의 과정과 배경, 역사적 의미 부분에 대한 집필기준 삭제·반영 여부가 포함됐다.

교과부 김관복 학교지원국장 등은 이날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설명회에서 "대강화 원칙에 따라 교과서에 실릴 주요 역사적 사실들의 선정과 서술 수준은 교과서 집필자들의 몫"이라며 "다만, 5·18 민주항쟁, 6월 민주항쟁 등 주요 역사적 사건들은 교과서에 서술돼야 한다. 누락된 검정 상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5·18에 대한 서술 부분이 교과서에 반영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5·18 부분이 교과부의 집필기준에 빠져 있는데다, 구체적인 내용을 누락하지 않고 교육과정 구현을 위한 서술 수준과 범위, 유의사항을 압축해 제시하는 '대강화'(大綱化) 원칙에 따라 집필자의 자율성이 강조됐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부 관계자가 이날 광주시 등 관련기관에서 요구한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

개정 요구안을 설명회 참석자들에게 배포하면서 "이는 참고 자료일 뿐, 교과부의 집필기준은 아니다"라고 말한 점도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또한 5·18 민주항쟁이 교과서에 반영되더라도 5·18의 역사적 의미와 민주화 발전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보다는 정치변동을 준 한 사건이라는 식의 설명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출판사 직원들은 다소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5·18이 집필기준에 빠져 있

는 만큼 교과서를 만들면서 이를 포함해야 할지 해야 할지 고민스럽다는 것이다.

모 출판사 한 편집자는 "이날 교과부에서 나눠준 자료 중 광주시에서 요구한 5·18 부분에 대한 개정요구안이 있는데, 이를 교과부 측에서는 참고용이라고만 말할 뿐 새 교과서에 포함하라고 꼭 짚어 얘길 하지 않았다"며 "집필기준에 5·18이 빠져 있는 만큼 집필자로서 반영 여부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연계·협력 6대 우수사례

대한민국을 여는 길

지자체간 연계·협력이 만드는 광역경제권시대! 뭉치면 더 나은 지방이 됩니다

연계·협력 3단계 성공전략

- 1단계-신뢰 구축 이웃 지자체와 교류·협력 ⇨ 공동목표 설정
- 2단계-비전 공유 공동사업·추진주체 확정 ⇨ 미래희망 제시
- 3단계-상생 발전 비용분담과 공동수혜 ⇨ 다 함께 잘 살기

※ 왜 연계·협력인가?

① 상동 경쟁력 향상-공동마케팅과 시너지 효과 ② 사회적 비용 감소-협업시설의 광역시설화 ③ 지역주민 편의증대-광역망으로 교통비 절감

지역발전위원회
Presidential Committee on Regional Development

경기 5개 시·군 '광역 쓰레기소각장 사업'
대상지역 이천·광주·하남·여주·양평 등 5개 시·군
사업목적 협오시설에 대한 지역이거주의 극복 + 첨단 광역소각장 건립
추진개요 ▶추진협의회 구성(2003년)

경북·강원 4개 시·군 '외씨버선길 사업'
대상지역 영월(Y)/봉화(B)·영양(Y)·청송(C) 등 BY2C 4개 시·군
사업목적 자연 친화형 트레킹 코스 개발 + 공동 마케팅 추진
추진개요 ▶홍화구간 개설 -영양·청송·영월 순차 개설(2011년)

영·호남 7개 시·군 '지리산권 관광상품 사업'
대상지역 남원·장수·곡성·구례/허동·선창·함양 7개 시·군
사업목적 지리산권 자연·역사·문화의 상품화 + 연계·협력상품 발굴
추진개요 ▶단체장협의회 출범(1998년) -기본계획 수립(2000년) ▶조합 설립(2008년) -7월 701 사업, 특별법 추진(2009년)

충북·강원·경북 6개 시·군 '중부권 공동마케팅 사업'
대상지역 제천·단양/영월·평창/영주·봉화 등 6개 시·군
사업목적 관광상품 특화 + 공동출자 + 공동마케팅 강화
추진개요 ▶중부권행정협의회(2004년) -11개 테마상품 개발(2009년)

부산·김해·양산 3개 지역 '대중교통 광역환승 할인제'
대상지역 부산·김해·양산 등 부산광역시와 경남 2개 시
사업목적 대중교통 편의 + 교통비 절감 +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개요 ▶광역환승 할인제 시행 협약(2011년 1월)

전남·경남 9개 시·군 '남중권 연계·협력 사업'
대상지역 광양·순천·여수·고흥·보성/진주·사천·남해·하동 등 9개 시·군
사업목적 관광·문화·상품개발 + 공동마케팅 전개
추진개요 ▶발전협의회 출범 -성진강 테마로드 추진(2011년)